

#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07호 / 02월 10일

## 금년도 중국경제 3대 현안: 전문가 종합분석

### 1. 개요

□ 최근 중국 經濟日報와 카스텔經濟평가中心(CEMC)이 공동으로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금년도 중국경제 3대 이슈(투자 및 소비, 재정정책, 실업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사, 분석하였음.<sup>1)</sup>

- 투자 및 소비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분간 소비보다는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해 각 소비주체의 소비패턴에 맞는 차별적인 소비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재정정책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조세제도의 개선과 통화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세

1) 참석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총 18명임. 蕭灼基(北京大學 經濟學院 教授), 劉國光(社會科學院 顧問), 李子奈(清華大學 中國經濟研究中心 教授), 許光建(人民大學 公共管理學院 副院長), 林兆木(國家計委宏觀經濟研究院 전임 부원장), 汪同三(社會科學院 數量經濟研究所 所長), 張漢亞(國家計委宏觀經濟研究院 投資研究所 所長), 袁守啓(國家計委宏觀經濟研究院 研究員), 黃海(國家經貿委 貿易市場局 局長), 來光賢(國家經貿委 信息中心 研究員), 王保安(國家財政部 綜合司 司長), 王大用(國家開發銀行 市場與產業分析局 局長), 李泊溪(國務院發展研究中心 研究員), 丁俊發(中國物流與採購協會 상무부회장), 戴園晨(社會科學院 經濟研究所 교수), 汪海波(社會科學院 工業經濟研究所 교수), 秦池江(中央財經大學 教授), 張文中(卡斯特經濟평가中心 主任).

금 징수율이 향상된 만큼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취업 및 실업대책에 있어서는 경제성장모델을 노동집약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2. 투자 및 소비

□ 작년도 고정자산투자는 18%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인이었으나, 소비의 증가속도는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였음.

- 중국정부가 공언한 대로 2020년도 경제규모가 2000년 대비 4배 늘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7.5% 내외의 성장을 시현해야 함. 그런데 소비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자산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함.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1,5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투자를 증가시켜야 할 것임(丁俊發).

-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국채발행이 필요하며, 개방확대를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함. 또한 비국유경제의 발전을 장려해야 함(林兆木)

- 작년도 고정자산투자의 고성장은 주로 부동산투자의 증가에 기인함. 그런데 부동산개발은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야 할 것임(戴園農).

- 절대적인 투자규모의 증가보다는 투자의 효율성을 우선시 해야 함. 교육과 사회보장, 환경보호,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취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가사(家事)서비스나 사설경비 등에 대한 교육개발 투자를 늘리면 정리해고자나 농촌의 잉여인력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음(張漢亞).

□ 금년도 소비증가율은 8~10%로 예상됨. 주택, 교육, 자동차, 통신, 레저, 관광 등의 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黃海).

- 현재 중국에서 중산층이상의 소비자는 자동차, 주택, 통신, 관광 등에 대한 소비에 관심이 많고, 저소득층은 가전, 의류, 식품 등의 구입에 관심이

높음. 정책당국과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 선호의 차이를 인식하여 소비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임(來光賢).

- 지역별, 소득 수준별 소비 특성을 고려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인다면 소비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李子奈).
- 농촌시장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는 거대한 성장잠재력이 있음. 전기, 도로, 상수도 등 농촌의 사회간접자본을 무단히 개선하면 농촌소비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음(許光建).

### 3. 재정정책

□ 확대재정정책은 최근 수년간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금년에는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금년도 정부투자는 △기술투자에 대한 저리융자 제공, △외자유치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융자 지원, △비국유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현행 생산형 부가가치세를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 △이자율의 적정 인하, △농업세 감면, 상속세 징수,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 등의 문제에 주력해야 함(汪海波).
- 조세 및 징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정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과거에는 국채발행을 통한 양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조세, 소득분배, 재정할인이자 등 정책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王保安)
-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시해야 함. 각종 농업세를 면제하여 농업을 지원하고, 농민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王大用).
- 재정투자의 방향을 조정하여 사회보장, 취업,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함(袁守啓).

- 최근 징세제도의 개선으로 재정수입이 크게 늘어났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영업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농업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함(秦池江).
- 기업에 대해서는 평균세율을 낮추고, 개인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張漢亞).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역할조정이 필요함. 국채발행을 기존의 연도총량 통제방식에서 연말잔액 통제방식으로 전환하면, 통화정책, 즉 공개시장 조절의 활용 공간이 확대될 수 있음(汪同三).
- 조세정책을 통해 소비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을 23%로 소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蕭灼基).

#### 4. 취업 및 실업문제

- 중국의 사회자원 가운데 잠재력이 가장 큰 것이 노동력 자원임. 풍부한 노동력이 중국경제의 장기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실시점에서는 심각한 취업압력을 조성하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노동인구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연자원 및 자본의 부족량이 부족한 편임.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풍부한 노동력을 고려한 성장전략을 채용해야 함.
  -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확대 효과가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인바, 성장과 취업을 동시에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함(劉國光).
  -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등 노동수요를 늘려야 함(張文中).
  - 취업확대 정책으로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소형기업,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제조업 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등이 필요함.
  - 또한 보다 정확한 실업률 통제시스템이 요구됨. 우선 실업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실업통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실업 지표를 지방정부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에 포함시켜야 함(秦池江).

- 실업대책은 실업의 원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o 첫째, 원시적 실업, 즉 공업화의 낙후에 따른 실업은 사회보장체제의 구축과 비정규직취업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함.
- o 둘째, 경기변동형 실업은 거시경제정책의 조정을 통해 취업을 확대할 수 있음.
- o 셋째, 구조적 실업은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산업간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음(袁守啓). (\*\*\*)